

프랑스의 광역권 개발전략

배 준 구 교수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I. 머리말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195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1982년 지방분권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광역행정의 수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레지옹(région: 지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지위를 승격하고, 분권화 시대에 맞게 계획체계를 개혁하여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세계화의 진전과 유럽연합의 역할 강화에 대응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프랑스는 경쟁력 있는 국토 조성을 위하여 도시간 네트워크의 재구성, 협력공간 차원의 지역개발 단위 도입, 실험적 초광역경제권 구상 및 지역간 협력사업단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OECD 국가들은 지역을 주도적인 공간경제 단위의 성격을 초월하여 분절화된 사회기능의 통합기제로 인식하고 있다(차미숙 외, 4).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와 지역간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방침을 발표하였다. 즉 2008년 7월 21일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에서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이라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체계를 발표하였다. 2008년 9월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화된 실행계획(Action plan)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을 구현할 중앙과 지역차원의 추진조직이 마련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국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크다. 이 연구는 프랑스의 광역경제권의 추진체제와 방식 및 개발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즉 이 연구는 광역경제권 개발의 추진 배경, 지역의 분류와 최근의 변화 내용, 광역경제권 추진체제와 방식, 광역경제권 추진방식과 개발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인터넷 자료와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프랑스를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과 면담을 하였다.

II. 광역권 개발의 추진 배경과 관련법 변천

1. 광역권 개발의 추진 배경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1982년 지방분권 이전까지는 집권적 개념에 바탕을 두었으나 점차 지방분산과 함께 광역적(지역적) 개념으로 확대 적용(1972년까지)된 후에 1982년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광역적 개념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부는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광역행정 구역(레지옹)을 확정하였다. 레지옹은 1959년 창설 당시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단순한 행정구역이었으며, 1964년에는 지역단위의 행정협의체가 구성되고, 1972년에는 공법상의 법인격과 예산상의 자치권을 갖는 특수공법인(établissement public: 지방영조물법인)으로 변경되었다. 1982년부터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레지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고, 지역계획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DATAR)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경제권 구상은 유럽연합의 역할이 증대하고, 국경이 개방됨에 따라 지역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간 보완성과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의 광역권 계획은 지역차원의 공식적인 관할구역인 레지옹 차원에서 수립되는 레지옹계획,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광역권 계획은 실험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는 6개 초광역경제권(super-régions)의 구상(계획), 대도시 지역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고 있는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계획과 같은 도시권 차원의 계획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광역권 개발 관련법의 변천

프랑스의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이 중심을 이루었고, 1950년대부터 경제계획 속에 국토계획을 일부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차원의 독자적인 국토계획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의 전환기에 국가계획은 경직성, 중앙집권적 성격, 그리고 국토계획의 순전히 '시설투자적' 시각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제11차 계획(1993-1997년)은 경제계획과 별도로 전국차원의 국토계획의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1993년에 중단되었다.

1995년 2월 4일의 "국토계획 및 발전 기본법률(LOADT: Pasqua 법률)"은 '국토계획 및 발전을 위한 전국계획(schéma nationa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SNADT)'과 '국토계획 및 발전을 위한 레지옹계획(schéma régiona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SRADT)', 그리고 '전국계획(schéma national)'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레지옹계획과 연계화하는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Etat-région)'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률은 국가계획의 경우 장기 전망(prospective) 방식과 부문별 계획방식을 채택하였다.

1999년 6월 25일의 '지속 가능한 국토계획 및 발전법률(loi d'orientation pour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LOADDT 일명 Voynet법률)'은 1995년 법률에서 정한 전국계획(SNADT)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동서비스계획(schémas de services collectifs: SSC)'을 도입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공동서비스계획은 중기계획으로 9개 부문, 즉 고등교육 및 연구, 문화, 보건위생, 정보통신, 여객수송, 화물수송, 에너지, 자연·농촌, 체육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서비스계획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치목표나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계획체제는 이제 국가계획인 공동서비스계획(SSC), 지역차원에서 레지옹의회가 공동서비스계획에 기초하여 수립하는 레지옹계획(SRADT), 그리고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도시권 계약, 특별지역계약 포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1> 최근 광역권 개발 관련법의 내용 변천

시기	주요 법률 및 헌법	내 용
1982.3.2	코뮌, 데파르트망 및 레지옹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	-레지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승격 -사전통제 폐지, 지사(préfet)제도 개혁
1982.7.29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	-계획체계 정비, 계획계약제 도입
1983.1.7 및 7.22	코뮌데파르트망,레지옹,국가간 권한배분 법(1983.1.7),개정법(1983.7.22 등)	-권한배분 체계와 권한배분의 변경 -권한이양과 재원이전 방법
1991.7.13	도시에 관한 기본법)	-주거의 다양화, 사회주택
1995.2.4	국토계획 및 발전기본법(LOADT)	-국토계획발전의 기본 방향 정립 -전국계획을 부문별 계획인 공동서비스계획(SSC)로 대체하고 장기구상 방식으로 전환
1999.6.25	지속 가능한 국토계획 및 발전기본법(LOADDT)	-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간 연대와 협력 강화 - 사회발전 경제적 능률성 및 환경보호 결합한 국토의 균형 발전
1999.7.12	지자체(코뮌)간 협력 간소화 및 강화법	-협력방식 단순화, 간소화, 재정협력 강화
2000.12.13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	-도시의 연대 및 재생 토지이용계획(POS)와 도시기본계획(SD)의 재정비, 도시발전간 균형, 노후주거지 재생
2003.3.28	공화국의 지방분권화된 조직에 관한 헌법 개정	-국가조직 지방분권화, 보충성 원칙과 선도 지자체, 권한이양, 자치입법 및 재정권, 주민투표제

1990년대에 도시 인구 집중과 농촌의 쇠퇴, 유럽연합의 역할 증대에 따라 제정된 국토계획 및 발전 관련 법률(1995년 LOADT 법률, 1999년 LOADDT 법률)은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의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와 도

시 네트워크로 재구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도농권연합체와 도시권연합체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계약 체결의 주체로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contrat de Plan Etat-Région)을 체결하는 가장 작은 공간에 해당한다.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은 1984년부터 5차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 기간은 제1차(1984-1988)와 제2차(1989-1993)는 5년이었으나, 제3차(1994-1999)는 6년, 제4차(2000-2006)와 제5차(2007-2013)는 7년으로 변경되었다. 제4차 계획계약부터는 유럽구조기금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이 7년으로 바뀌었다.

지방분권 개혁은 1982년 좌파인 미테랑(Mitterrand) 대통령 하에서 국가행정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되었고, 우파인 시라크(Chirac) 대통령 하에서 2003년 3월 28일의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개정 헌법('공화국의 지방분권화된 조직에 관한 헌법')은 레지옹을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적 측면에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개정에 이어 제정된 실험법(2003.8.2)과 권한재배분 등으로 지역에서 점진적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배준구, 2004a: 46-49).

III. 프랑스의 광역권 분류

프랑스의 광역권은 크게 3가지 유형, 즉 첫째는 공식적인 관할 구역인 레지옹(région: 지역), 둘째는 코뮌간 협력 기구인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등과 같은 도시권, 셋째는 최근에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초광역권(super-rég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레지옹(région)

레지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공식적인 관할구역(행정구역)이고, 일종의 계획권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부는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광역행정의 수요에 부응하여 레지옹을 광역행정 구역으로 창설하였다. 레지옹은 1959년 창설 당시에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하였고, 1964년에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었다. 레지옹은 1972년에 공법상의 법인격과 예산상의 자치권을 갖는 영조물법인(établissement public)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26개 레지옹 중에서 가장 큰 '일드프랑스(Ile de France) 레지옹'은 공식적인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에 해당한다(Noin, 1989: 117). 이는 파리를 포함한 8개의 데파르트망(도)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리시 중심부로부터 반경 약 110km에 이르며, 국토면적의 2.5% (12,012km²)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현재 26개 레지옹(région: 지역), 100개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도), 36,783개 코뮌(commune: 시읍면)의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지옹의 평균 인구는 약 270만 명으로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평균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데파르트망은 그 수가 100개나 되고, 평균 인구가 약 60만명으로 우리나라 도에 비하여 훨씬 작은 규모이다. 코뮌은 인구 2천명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약 87%인데, 대도시 코뮌은 가장 큰 경우 약 215만 명(파리시)에 달한다. 레지옹의 관할구역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프랑스의 레지옹 관할구역



2. 지역개발의 새로운 단위(pays, agglomération)와 도시권

프랑스는 1990년대에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변화 및 역할 강화,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농촌의 쇠퇴화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하였다. 1995년의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법률(LOADT)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기본 단위인 '도농권연합체(pay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를 기초로 재구성할 것

을 제안하였다. 1995년의 수정 법률인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1999년 법률(LOADDT)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라는 개념을 지역개발의 기본 단위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연합체(pays, agglomération)는 지방자치단체도 행정계층도 아닌 새로이 창안된 협력 공간이다.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법률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SD)을 2002년부터 지역결속기본계획(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SCOT)으로 대체하며, 지역결속기본계획은 최대한 도농권연합체 및 도시권연합체의 범역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였다(Merlin, 98-100).

도농권연합체(pays)는 도시와 농촌 배후지 간에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는 1995년 2월에 42개가 실험적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인구는 65,892명(최저 17,000명, 최고 378,742명), 평균 코뮌 수는 78개였으며, 1999년 9월 말에 106개 구성, 2007년 1월 현재 334개(프랑스 인구의 41%, 본토 면적의 73%에 해당)가 구성되어 있다(Leurquin, 2002: 267, 286; DIACT 내부 자료).

1999년 LOADDT 법률에 의하면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는 통계청(INSEE) 도시화 지표의 하나인 ‘도시권(aire urbaine)’ 중에서 총인구가 5만명 이상이며, 중심 코뮌의 인구가 1만 5천명을 넘는 지역이다. 도시권연합체는 코뮌간의 협력기구인 도시공동체(communautés d'agglomération: CA),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CU)가 구성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도시권 차원과 관련하여 후술한다. 1999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프랑스 본토에는 총 354개의 ‘도시권(aire urbaine)’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도시권에는 전체 인구의 77%가 거주하고, 이 중에서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140개에 달한다. 이러한 도시권연합체는 프랑스 지방대도시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정책의 일환이다(Merlin, 99-100; 정옥주, 2004, 222-225).

3. 초광역권(super-région)

DATAR가 수년간 연구를 거쳐 2000년에 공표한 ‘2020년 프랑스 구상(Aménager la France de 2020)’은 수도권 중심적 공간구조를 탈피하여 다핵공간구조 확립을 위하여 전국을 6개 초광역권(super-régions)으로 구분하였다. 즉 6개 초광역권은 동부권(Grand Est), 남동부권(Grand Sud-Est), 남서부권(Grand Sud-Ouest), 서부권(Grand Ouest), 북부권(Pays du Nord), 수도권(Bassin parisien)이다. 2020년 프랑스 구상에서는 새로운 경제통계의 활용, 사회변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간 협력체(interrégionalité) 구성 및 네트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6개 초광역권은 유럽계획의 통계지역단위(NUTS I)에 상응한다. 6개 초광역권은 대규모 하천(센, 론, 가론, 르와르, 뫼즈 강)을 지리적 범위로 하여 경제활동과 인구 분포를 기초로 구분하였기에 초광역경제권에 해당한다(DATAR, 2000: 64-76; Girardon, 185).

<표 2> 6개 초광역권(super-régions)의 구성 및 인구

지역	관련 레지옹(또는 데파르트망)	인구(1999)
동부권(Grand Est)	로렌, 알자스, 프랑시-콩테, 부르고뉴, 샹파뉴-아르덴느	811만 명 (13.9%)
남동부권(Grand Sud-Est)	론-알프스,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 랑그독-루시용, 오베르뉴, 코르시카	1402만 명 (24%)
남서부권(Grand Sud-Ouest)	아키텐느, 리무진, 미디피레네, 랑그독-루시용	627만 명 (10.7%)
서부권(Grand Ouest)	브르타뉴, 페이드라르와르, 프와투-샤랑트	777만 명 (13.3%)
북부권(Pays du Nord)	노르-파-드-칼레	400만 명 (6.8%)
수도권(Bassin parisien)	일-드-프랑스, 파키르디, 샹파뉴-아르덴느, 상트르, 오토-노르망디, 바스-노르망디 레지옹, 사르트 및 이온느 데파르트망	2060만 명 (35.2%)

자료: DATAR(2000), 4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동부권은 로렌느(Lorraine), 알자스(Alsace), 프랑시-콩테(Franche-Comté), 부르고뉴(Bourgogne), 샹파뉴-아르덴느(Champagne-Ardenne) 레지옹으로 구성되며, 인구는 1999년 현재 811만 명으로 전체의 13.9%이다. 동부권의 주요 도시 인구를 보면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26.7만 명, 랭스(Reims) 19.1만 명, 디종(Dijon) 15.3만 명, 메츠(Metz) 12.7만 명, 브장송(Besancon) 12.2만 명, 낭시(Nancy) 10.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유럽의 중부와 라인강 연안에 위치하는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교역과 공업의 전통이 강하다. 이 지역은 우수한 훈련과 연구망에 의존하여, 특히 낭시(Nancy)와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의하여 제1차 계획의 경제적 잠재력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라인강, 모젤(Moselle) 강 및 두브(Doub) 계곡의 대규모 교역축상의 교차점에 조직된 도시망은 유럽과 밀접한 관계로 매우 국제화되어 있고, 현대적인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들 지역 각각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대폭적인 산업재전환은 공통된 특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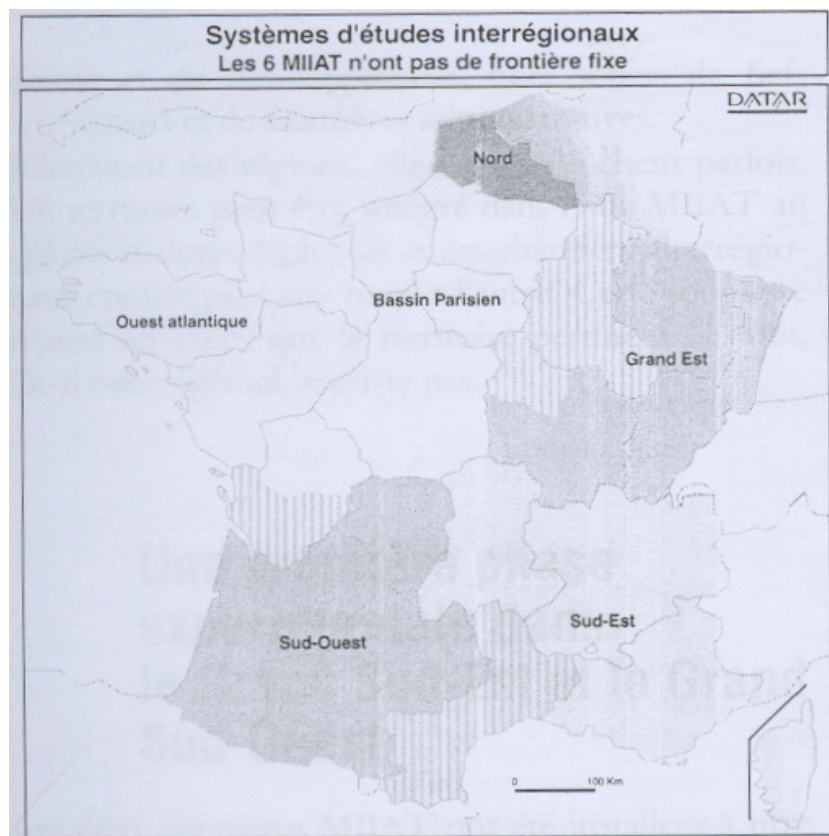
남동부권은 론-알프스(Rhone-Alpes),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레지옹, 그리고 이들 레지옹과 협력하는 오베르뉴(Auvergne) 및 코르시카(Corse) 레지옹으로 구성되며, 인구는 1402만명으로 전체의 24%이다. 이 지역의 레지옹별 인구는 론-알프스(Rhone-Alpes) 564.5만 명, 프로방스-알프스-코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 450.6만 명,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229.6만 명, 오베르뉴(Auvergne) 130.9만 명, 코르시카(Corse) 26만 명이다.

남서부권은 아키텐느(Aquitaine), 리무진(Limousine), 미디피레네(Midi Pyrénées) 레지옹, 그리고 이들 레지옹과 협력하는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레지옹으로

구성되며, 인구는 627만 명으로 전체의 10.7%이다. 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레지옹의 인구를 보면 아키텐느(Aquitaine) 290.8만 명, 리무진(Limousine) 71.1만 명, 미디피레네(Midi Pyrénées) 255.2만 명을 나타내고 있다.

서부권은 브르타뉴(Bretagne), 페이드라르와르(Pays de la Loire), 프와투-샤랑트(Poitou-Charentes) 레지옹으로 구성되며, 인구는 777만 명으로 전체의 13.3%이다. 이 권역에는 대도시가 별로 없는 반면에 도시(코뮌)간 협력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인구 10만 명 이상의 10개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s)를 연계하는 중소도시 네트워크이 지리적으로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

<그림 2> ‘2020년 프랑스 발전 구상’ 의 6개 초광역권



북부권은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 레지옹으로 구성되고, 초국가적 도시 고리를 이루며, 인구는 400만 명으로 전체의 6.8%이다. 이 지역은 런던, 브뤼셀, 파리 같은 수도의 영향권에 있고, 그 영향은 베네룩스(Bénérux)와 파카르디(Picardie)까지 미친다.

수도권은 파리를 중심으로 센(Seine), 르와르(Loire), 르즈(Meuse), 모젤(Moselle) 강 유역의 광대한 분지로서 ‘일-드-프랑스(Ile-de-France) 레지옹’ 행정구역을 넘어서 파리의 영향권에 있는 캉(Caen), 루앙(Rouen), 르아브르(Le Havre), 오를레앙(Orléans), 투르

(Tours), 르망(Le Mans), 아미앵(Amiens), 랭스(Reims) 등의 도시까지 포함한다. 수도권은 파리에서 반경 200-250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프랑스 전체 면적의 약 30%, 인구는 2,060만 명으로 본토 인구의 35.2%에 달한다(Noin, 117-120; Damette et Scheibling, 1992). 이 권역은 1970년대부터 관심이 높아져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백서 발간, 장기발전 구상 등을 하였다(Noin, 117; Philipponneau, 227).

IV. 광역권 개발의 관련 기관과 추진 방식

1. 광역권 개발의 관련 기관과 역할

1) 중앙정부 차원

(1) DIACT(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s des territoires: 국토계획청 또는 국토계획부처간 기획단)

DIACT는 1963년에 창설된 DATAR가 경제변화부처간사업단(MIME: 2003년 설치)의 업무를 통합하여 2005년 말에 확대 개편되었다. 이는 국토 경쟁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세 계화 등에 따른 경제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산업) 전략과 국토발전 전략을 통합한 것이다. DATAR는 국토 및 지역정책에 관련된 업무들이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적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63년 드골 대통령 당시 설치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계획 담당부처가 있지만 국토 및 지역발전 정책은 DIACT에게 일임하고 있어 실제로 DIACT(구 DATAR)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CGP(기획청 또는 기획단으로 표기)와 위원회, 자문기관이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DIACT는 국토 및 지역정책의 입안, 촉진 및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고,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집행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한다. DIACT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고, 레지옹에 담당관을 파견하며, 지역에 설치된 지역경제개발청(commissariats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지역경제개발사업으로도 표기됨)과 연계하여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한다.

DIACT는 2007년 9월 1일에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청장(délégué: 또는 단장으로 표기), 자문관(coseillère), 비서실장, 부처간업무 및 조정담당 국장 겸 부청장, 전망·평가·연구·국제 부장(pôle), 경제변화·개발 국장, 그리고 9개 팀(국토 다이내믹팀, 지속가능 개발·교통·대도시팀, 혁신·경쟁·정비팀, 지역개발·유럽정책팀, 소도읍·연구소 협력팀, 국토 관측(Observatoire)팀, 전망·연구팀, 국제협력팀, 경제개발·변화팀(프랑스국제투자사무소인 AFII와의 관계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CGP(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 기획청 또는 기획단)

CGP는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연구·평가와 각 부처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CGP는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 수립 때에 관여하며, 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계획과 관련하여 경제적 조정 역할을 한다. CGP는 1946년에 설치되어 DATAR 창설 이전까지 국토계획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1963년에 DATAR 출범 이후에는 경제사회발전계획상의 내용(conclusions)을 통합하고, 국토계획의 구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DATAR(현 DIACT)와 협력한다.

(3) CIADT(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et des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국토계획발전부처간위원회)

이는 수상 주재 하에 운영되는 국토계획 및 개발에 관한 정책과 우선사업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 관련 장관 모두가 참석한다. DIACT는 이 위원회의 사무처로서 주요 정책을 입안, 시행한다. 1963년 창설 때에는 국토계획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du territoire: CIAT)였는데 1995년에 Pasqua 법률에 의하여 '발전(développement)'이 추가되어 CIADT로 변경되었다.

2) 레지옹 차원

(1) 레지옹의회

레지옹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레지옹계획을 수립, 집행한다. 1982년 지방분권화에 따라 레지옹은 종전에 영조물법인(établissements public)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어 1986년 3월에 주민 직선에 레지옹의회가 구성되었고,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의회의장이 자치단체장이 되었다. 광역권 계획, 특히 수도권계획 및 관리는 지방분권화 이전에는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주민 직선에 의한 레지옹의회가 구성된 이후 1995년 2월 4일의 법률에 의하여 일드프랑스(수도권) 레지옹이 수도권 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5년 2월 법 이전의 경우 수도권기본계획 수립 때에는 국가가 일드프랑스 레지옹과 협의를 하였으나 국가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주도함에 따라 당시에 레지옹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2) 레지옹 지사(préfet)

프랑스는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는 지사(préfet: 레지옹청장으로도 표기) 권한 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82년에 단행된 지방분권은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사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행정권한의 위임(déconcentration)'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중앙의 모든 부처가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

한 영역에 걸쳐 레지옹과 데파르트망 수준에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정부를 대표하는 지사는 내무부 장관 산하에 있으며(내무부 장관과 수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됨),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의 최고위 관료로서 중앙부처의 파견국장을 지휘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직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조직에 대한 예를 제시한데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2007년 5월에 취임한 니콜라스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은 중앙부처의 수를 절반 수준인 15개로 대폭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중앙부처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일부 통폐합하고, 향후 더 나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

레지옹 지사는 국토계획 및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국가 및 유럽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방향(orientation)을 정하고 집행함. 레지옹 지사는 국토계획, 경제개발, 농촌개발,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문화, 고용, 주거, 도시혁신, 공공보건, 그리고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유럽연합정책에 관하여 국가의 정책을 시행함. 2004년 개혁에 따라 레지옹의 부처간 업무는 강화되었으며, 특히 국가이익, 법률 및 공공질서 준수하는 데파르트망 지사의 행위를 조정 및 촉진하는 역할을 함. 레지옹지사는 국가와 레지옹간의 중재자로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체결 때에 국가대표로서 협상하고 서명하며, 국토계획발전레지옹협의회(CRADT)를 레지옹의회의장과 함께 공동 주재한다.

(3) 지역경제개발청(commissariats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또는 지역경제개발사업단)

지역경제개발청은 기업(주로 세계적 기업)의 시장조사와 유치, 산악지역의 경제개발과 현대화를 촉진하는 임무를 가진다. 지역경제개발청은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기업 상호간 협력 하에 운영되는 유연한 협력 구조로 되어 있고, 중앙정부(DIACT)가 운영을 감독한다. DIACT(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s des territoires: 국토계획청 또는 국토계획부처간기획단)는 범부처적 차원에서 국토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DIACT는 1963년에 창설된 DATAR와 2003년에 설치된 경제변화부처간사업단(MIME)의 업무를 통합하여 2005년 말에 확대 개편되었다. 지역경제개발청은 프랑스국제투자진흥청(AFII)의 '제1순위 대리인(correspondants)'이며, 프랑스국제투자진흥청은 DIACT 및 재정경제 담당 부처의 감독 하에 있고, 해외 시장조사 등을 한다. 지역경제개발청은 1970년대에 설치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법적 성격은 협회에 해당한다(Mangin, 37-38).

<표 3> 지역경제개발청의 구역과 해당 레지옹

지역경제개발청	해당 레지옹(괄호 안은 데파르트망)
ADIMAC	Auvergne(Allier, Cantal, Haute-Loire, Puy-de-Dôme), Centre(Indre, Cher), Limousin(Corrèze, Creuse, Haute-Vienne), Languedoc-Roussillon(Aude 일부, Gard 일부, Hérault 일부, Lozère), Midi-Pyrénées(Aveyron, Lot, Tarn-et-Garonne 일부), Rhône-Alpes(Ardèche, Rhône 일부: Monts du Lyonnais)
ADIELOR	Lorraine(Meurthe-et-Moselle, Meuse, Moselle, Vosges)
CAP Développement	Champagne-Ardenne(Ardenne, Aube, Marne, Haute-Marne, Picardie(Aisne, Oise, Somme)
CPI	Ile de la Réunion
Franche Comté Expansion	Franche-Comté(Doubs, Jura, Haute-Saône, Territoire de Belfort)
Languedoc-Roussillon Prospection	Languedoc-Roussillon(Aude, Gard, Hérault, Lozère, Pyrénées-Orientales)
Normandie Développement	Basse-Normandie(Calvados, Manche, Orne), Haute-Normandie(Eure, Seine-Maritime)
Nord France eXperts	Nord/Pas-de-Calais
Ouest-Atlantique	Bretagne(Côtes d'Armor, Finistère, Ile-et-Vilaine, Morbihan), Pays de la Loire(Loire-Atlantique, Maine-et-Loire, Mayenne, Sarthe), Poitou-Charentes(Charente, Charente-Maritime, Deux-Sèvres, Vienne)
2ADI	Aquitaine
Midi Expansion	Midi-Pyrénées
MDER PACA	Provence-Alpes-Côte d'Azur

지역경제개발청은 총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서 4개, 즉 Adimac, Cap Développement, Ouest-Atlantique, Normandie Développement는 2개 이상의 레지옹이 속해 있어 레지옹간 협력 하에 운영된다. 3개 지역경제개발청, 즉 2ADI (Aquitaine 레지옹), Midi Expansion(Midi-Pyrénées 레지옹), MDER PACA(Provence-Alpes-Côte d'Azur 레지옹)은 2001년부터 설치되었다. 지역경제개발청은 2003년 현재 직원이 218명이고, 예산은 23백만 유로이다. 예산은 DATAR(현 DIACT) 지원금이 7.6백만 유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11.15백만 유로, 유럽연합 지원금 일부, 기업(회원 약 1,000개) 분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경제개발청은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기업 간 협력 하에 운영되며, DIACT가 운영을 감독한다 (http://www.diact.gouv.fr/fr_1/diact_partenaires_49/relais_tutelles_327/agences_regionales_developpement_747.html).

<그림 3> 프랑스의 지역경제개발청 구역



(4) 각종 협의회, 위원회

○ 레지옹간 협의회(ententes interrégionales)

이는 레지옹간 협력을 위한 광역행정조직으로서 1992년 2월 6일 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 협의회는 유럽연합 출범 후에 지역계획 및 경제개발에 관한 국가간 경쟁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레지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다. 레지옹간 협의회는 2-4개의 인접한 레지옹의 회로 구성되는 영조물법인(établissement public)이며, 한 레지옹이 복수의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관계 레지옹의 의결과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국참사원(Conseil d'Etat)의 정령(décret)에 의하여 설치된다. 이 협의회는 의결기관은 의회이며, 집행은 자치단체장인 의회의장이 맡고, 차입금이 재원으로 인정된다. 이 협의회는 국가와 계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Dantonel-Cor, 105-106; Mangin, 12-13).

○ 국토계획발전레지옹협의회(conférence régionale de l'aménagement et du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CRADT)

이는 각 레지옹에 설치되며, 1999년 6월 25일 법률이 정한 국토계획발전레지옹기본계획(schéma régionale de l'aménagement et du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SRADT)과 1995년 2월 4일 법률이 정한 공동서비스기본계획(schéma de services collectifs) 및 도시계획법이 정한 지역정비지침(directives territoriales d'aménagement: DTA)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또한 이 협의회는 각 레지옹에서 공공서비스 업무의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에 관련된 레지옹 및 데파르트망간 기본계획(schémas régionaux et interdépartementaux)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이 협의회는 국가대표(레지옹의 데파르트망 지사, 레지옹국고출납관, 장학관 등), 레지옹의회의장이 임명하는 레지옹의회의원 11명, 레지옹내 데파르트망의회의장 8명, 시장협의회가 임명하는 코뮌공동체(C.C)·도시권연합체공동체(CA)·대도시공동체(C.U)·도농권연합체(pays)의 대표 10명,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CESR) 의장 및 위원 11명, 각종 조합대표 12명, 각종 협회 대표 6명으로 구성된다.

○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CESR)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e régionale: CESR)는 경제사회분야(기업, 전문분야의 대표, 조합대표, 공공기관 및 협회의 대표, 전문가)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관으로서 레지옹의회의 심의에 앞서 지역계획과 지역이익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문한다.

○ 레지옹행정위원회(CAR)

레지옹행정위원회(comité de l'administration régionale: CAR)는 2004년 4월 29일 정령(décret)에 의하여 종전의 레지옹행정협의회(conférence administrative régionale: CAR)의 권한을 확대하여 승계한 자문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레지옹에서 국가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의 정책 시행에 필요한 수단을 검토함. 특히 레지옹의 국가업무 조직 및 운영, 협약의 준비 및 시행, 국가의 공공투자 결정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레지옹 지사, 데파르트망 지사, 레지옹 사무총장, 레지옹 국고출납관, 감사관(inspecteur général), 국장들로 구성되며 레지옹 지사가 위원회를 주재한다(<http://www.paca.pref.gouv.fr/frameset.php>; Moreau, 209).

3) 초광역권 차원

(1) MIIAT(Missions interministérielles et interrégionale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국토계획 부처간 및 지역간 사업단)

정부는 6개 초광역권(super-régions)에 실험적으로 MIIAT 설치할 것을 1997년 12월에 결정한 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를 설치하였다. MIIAT는 국가 임명 레지옹 지사(préfet)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레지옹간 협력체로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MIIAT는 조정자인 레지옹 지사의 책임 하에 있는 지역간 연구체제이며, 그 구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MIIAT는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레지옹 지사 아래에는 레지옹사무처(SGAR)와 중앙정부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건설국, 환경국, 농업국, 산림국 등)이 있다. MIIAT는 계획 및 전망 작업을 통하여 DATAR(현재 DIACT)에 의하여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간 접근방법을 체계화한 것이며, DATAR 예산에 의하여 운영된다. MIIAT는 교통하부구조(항만, 철도, 도로, 운하, 공항), 고등교육기관, 연구, 정보화, 문화, 경제개발 등의 영역에서 여러 레지옹에 걸쳐있는 사업을 조정한다. MIIAT는 레지옹간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분야별 중기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옹간 사업의 내용을 정한다. 또한 유럽의 지역개발을 예측하고, 장기 전략의 주요 개발부문을 확인하며,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특별사업을 제안한다(DATAR, 2002b, 1).

MIAT는 1998년에 1차적으로 남동부권, 남서부권에서 실험적으로 설치되었다. 수도권의 MIIAT는 이 권역에서 10년 동안 추진된 사업의 연장 속에서 1999년에 설치되었다. 서부권의 MIIAT는 2000년 2월 28일에, 동부권의 MIIAT는 2000년 10월 25일에, 북부권의 MIIAT는 2000년 말에 설치되었다. MIIAT는 2003년에 제4차 계획계약(2000-2006년)의 수정 범위 내에서 6개 초광역권 각각의 공공행위자 및 사회경제적 파트너들과 논의를 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였다(Mangin, 37-43, DIACT 내부자료).

(2) MEDCIE(Missions d'études et de développement des coopérations interrégionales et européennes: 유럽 및 지역간 협력개발연구사업단)

세계화되는 경제와 유럽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경계의 범주를 초월한 수준에서 사업계획(projets)의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2003년 12월 회람(circulaire)에 의하여 DATAR는 MEDCIE를 설치하여 MIIAT를 대체하였다. MEDCIE는 유럽의 국경을 초월하는 레지옹간 사업계획, 특히 미래 계약화 관점에서 구조적 사업계획에 역점을 둔다. Grand Sud-Est(남서부권)의 MEDCIE는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 론느-알프스(Rhône-Alpes),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오베르뉴

(Auvergne), 코르스(Corse) 레지옹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론느-알프스 레지옹청의 레지옹 지사를 보좌하는 사무처장(SGAR))이 담당한다

(http://www.paca.pref.gouv.fr/sgar/publications/docs/ras/2005/ra_2005_part1).

DATAR(현 DIACT)는 MEDCIE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전망 검토 작업의 지역간 활성화와 사업계획의 지역간 협력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립하였다.

정부는 국토계획 전략 차원에서 2003년 12월의 국토계획발전부처간위원회(CIADT)에서 50개 대규모 우선사업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우선사업은 주요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이나 유럽수준의 연구와 관련되며, 6개 초광역권(super-régions)별로 배분되었다(DATAR, 2003: 22-23).

2005년 7월 5일 회람(circulaire)은 MEDCIE 조직과 사업 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국가 임명 레지옹 지사는 조정자로서 MEDCIE 사업을 추진하고 조종(pilotage)한다. MEDCIE는 연구 주제에 관련된 국가기관 전반에 참여하며, 레지옹의회와 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와 협력하며, 지역간 접근에 관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MEDCIE는 3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즉 대규모 공간계획(대규모 회랑, 교통망, 자연공간, 산악지대 등), 미래를 위한 방식(특히 계약 수립 절차)의 개선, 국가 장기계획의 선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토(Territoires) 2030> 프로그램 차원의 전망 검토에 대한 기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MEDCIE는 2004-2006년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하여 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고등교육, 연구 및 혁신간의 관계, 대도시 네트워크의 구조 및 조직, 국경을 초월한 협력, 지역간 수준의 산업클러스터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6개 초광역권의 MEDCIE는 사업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DATAR)로부터 32만 유로를 지원받았다(DIAC, 86).

2. 광역권 개발의 추진 방식

1) 계획계약

프랑스는 1982년부터 지방분권을 실시하면서 분권화된 계획체제를 정립하였다. 특히 이러한 계획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은 프랑스 계획의 독창적인 주요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계획계약은 1970년대에 이용된 계약 방식을 지방분권 이후 개발의 계획화라는 점에서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계획계약은 한편으론 지역발전을 조화롭게 하는 수단이며, 다른 한편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이다. 계획계약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에 서명하고, 국가에서 투자하는 예산액이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배준구, 2006: 198-203).

<표 5>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의 투자분담 (단위: 백만 유로)

레지옹	제1차(1984-1988)		제2차(1988-1993)		제3차(1994-1999)		제4차(2000-2006)	
	국가	레지옹	국가	레지옹	국가	레지옹	국가	레지옹
Alsace	170.29	109.61	257.44	317.89	343.27	228.95	453.84	426.06
Aquitaine	325.94	203.21	328.02	233.02	464.60	389.28	722.76	719.16
Auvergne	149.40	81.41	206.72	106.87	374.26	164.04	407.04	268.80
Bourgogne	144.06	97.57	236.31	152.89	315.48	238.63	376.17	331.86
Bretagne	297.12	149.10	554.58	285.63	792.64	458.49	907.07	653.19
Centre	128.06	88.42	240.64	166.49	365.68	274.41	548.97	500.34
Champagne-Ardenne	90.71	69.36	203.21	200.01	274.35	203.63	367.25	377.75
Corse	129.58	54.88	76.53	49.55	105.95	88.48	248.64	231.04
Franche-Comté	139.80	86.59	207.00	197.62	276.01	181.48	335.69	285.85
Ile-de-France	1,103.43	1,305.27	1,299.17	1,747.10	1,701.24	3,545.23	2,994.86	4,667.53
Languedoc-Roussillon	316.03	129.58	397.39	215.75	562.57	352.95	691.36	618.97
Limousin	109.92	48.17	172.16	98.27	234.98	133.5	327.61	187.92
Lorraine	466.19	159.92	496.21	290.89	669.05	527.92	816.88	681.46
Midi-Pyrénées	246.21	126.08	511.47	286.76	643.24	440.15	854.17	813.81
Nord-Pas-de-Calais	681.75	375.33	1,011.16	650.93	1,260.94	767.5	1,532.11	1,043.64
Basse-Normandie	118.76	74.24	252.23	197.92	338.96	323.68	539.52	764.05
Haute-Normandie	77.60	79.73	221.65	202.19	346.88	378.36	497.14	524.88
Pays de la Loire	214.19	150.16	304.27	214.05	454.01	321.7	694.27	623.08
Picardie	297.12	156.26	325.02	260.20	380.12	364.66	459.18	482.34
Poitou-Charentes	160.07	86.44	248.37	314.52	385.62	268.74	488.75	430.59
Provence-Alpes-Côte d'Azur	630.68	406.12	435.97	354.63	664.60	486.31	1,115.32	1,070.47
Rhône-Alpes	386.15	231.11	580.39	394.95	785.10	705.40	1,271.58	1,243.22
Bassin parisien					50.77			
소계	6,383.06 (59.8%)	4,268.57 (40.2%)	8,626.89 (55.4%)	6,938.13 (44.6%)	11,790.62 (52.1%)	10,843.47 (47.9%)	16,650.17 (50.0%)	16,946.01 (50.0%)
합계(국가 + 레지옹)	10,651.63(100%)		15,565.02(100%)		22,634.09(100%)		33,596.18(100%)	

자료: DATAR(2002a), Les contrats de plan Etat-Région, 16-17을 토대로 재작성한 것임

계획계약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레지옹)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투자를 약속(계약)하는 것이다. 계약의 덕택에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협상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은 데파르트망, 코뮌, 공공기관, 도농권연합체(pays),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s)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로 국가(레지옹지사)와 레지옹(의회회장)간에 체결된다. 유럽구조 정책과 결속을 갖기 위해 구조기금(DOCUP)도 계약에 포함된다. 계획계약의 재정은 유럽연합, 정부,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민간부문(기업, 협회)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레지옹은 해당 계획계약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계획계약을 체결하며,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에서 분담 금액이 명시된다(Leroy et Potal, 81-88).

계획계약 과정에는 DIACT를 비롯하여 기획청(CGP), 각종 위원회, 레지옹 지사, 레지옹 의회 등이 참여한다. 즉 DIACT는 범부처적 차원에서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국가

와 레지옹간 계획계약과 관련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레지옹에 이송하며, 주요 우선사업에 대하여 레지옹과 협의하고 관계부처간의 협의, 조정을 한다. 또한 시행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며, 다른 평가기관들의 의견 및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차기 계획계약의 수립 지침과 시행과정에 반영한다(Madiot, 11-24; DATAR, 2002a: 42-43).

2) 협정

광역권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간 협정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식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레지옹지사와 레지옹의회들간의 협정이다. 즉 레지옹간 협정(conventions interrégional)은 산악지역(환경, 관광, 농업, 산림, 자연재해 예방 등), 해안지역 등과 같이 여러 레지옹에 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다년도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국가 임명 레지옹 지사와 레지옹의회들 간에 체결되며, 재원은 공동 부담한다. 즉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산악지대 협정(2007-2013년)에는 6개 레지옹이 참여하였고, 알프스 협정에는 2개 레지옹이 참여하였으며, 쥐라(Jura), 보귀(Vosges) 및 피레네(Pyrénées) 협정에는 각기 3개 레지옹이 참여하였다(http://www.diact.gouv.fr/fr1/amenagement_du_territoire_44/regions_interregions_655/).

둘째, 레지옹 지사와 위원회간의 협정이다.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산업클러스터와 유사함) 전략은 광역권 개발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각 경쟁거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Comité de coordination dédié)는 부처간 사업단(Groupe de travail interministériel: GTI)과 협력하여 국가가 임명하는 레지옹 지사와 협정을 체결한다. 조정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레지옹 산하 파견인, 필요에 따라 대학 장학사나 총장, 지방자치단체 파견인, 부처간 사업단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레지옹 지사는 중앙정부 산하 특별행정기관(레지옹산업연구환경국, 레지옹농림국 등)을 대표하고, 경쟁거점 관련 사업에는 대상 사업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DIACT 및 조정위원회와 연계, 협력한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레지옹의회, 데파르트망의회, 도시권연합체 등)는 경쟁거점 사업에 참여하여 재원을 부담하며, 경쟁거점에 입주하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경쟁거점(매년 총 15억 유로)의 지원금은 3억 유로는 조세 감면을 통해, 4억 유로는 중앙부처의 지원을 통하여, 8억 유로는 공탁금고(CDC), 공공기관, 즉 국립연구청(ANR), 산업혁신청(AII), 중소기업지원단체(groupe OSEO)와 같은 기관에 의하여 지원된다. 경쟁거점은 총 71개(세계적 경쟁거점 7개,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10개, 국가적 경쟁거점 54개) 중에서 2개 이상의 지역간에 협력하는 사업이 27개(4개 지역간 2개, 3개 지역간 8개, 2개 지역간 17개)로 전체의 38%에 달한다(Jacquet et Darmon, 75-82; 배준구, 2008a: 229-231).

셋째, 위원회와 다수 참여기관들간 협정이다. 즉 아비뇽 도시권(Grand Avignon)은 인구가 약 25만명이고,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PACA) 레지옹에 속해 있다. 세계적으

로 유명한 아비뇽 축제는 아비뇽축제위원회와 4개 기관들(국가, 시, 데파르트망, 레지옹)이 축제 지원을 위하여 5개 당사자간 다년도 협정(convention)을 체결하였다. 아비뇽 축제의 예산은 약 9백만 유로인데 자체 제정이 약 40%이고, 나머지는 4개 감독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다. 재정지원 금액 중에서 국가(문화부)가 가장 많이 지원(약 60%)하며, 그 다음은 아비뇽 시, 데파르트망, 레지옹의 순으로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다. 2004-2006년 동안에 재정지원은 매년 국가가 3,343천 유로, 아비뇽시 1,342천 유로, 데파르트망 565천 유로, 레지옹 480천 유로를 분담하였다(PACA 레지옹 내부자료; 배준구, 2007: 53).

3) 대도시공동체 등 코뮌간 협력기구

기초자치단체(코뮌)들은 협력 기구인 각종 공동체(communautés), 즉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CU), 도시공동체(communautés d'agglomération: CA), 농촌공동체(communautés de communes: CC) 등을 구성한다. 2008년 1월 1일 현재 대도시공동체(CU)는 14개, 도시공동체(CA)는 171개, 농촌(코뮌)공동체(CC)는 2,393개가 구성되어 있다. 대도시공동체는 대도시 지역, 도시공동체는 중간 규모 도시, 농촌공동체는 농촌과 소도시 관리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Ministère de l'Intérieur/DGCL, 2008: 9). 이러한 공동체들은 다시 공동체연합 형태인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를 구성한다. 도농권연합체는 중소도시와 주변 농촌 배후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바탕을 둔 도농 연계 개발을 위하여 구성된다. 도시권연합체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중간 규모 이상 도시권의 통합적 개발과 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다. 도농권연합체와 도시권연합체는 각기 발전계획(charte de pays 또는 projet d'agglomération)을 수립하며, 이러한 발전계획은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와 같은 사업(개발계획) 지역은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범주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레지옹, 데파르트망)와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5만명 이상인 모든 도시지역에서는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을 적용하여 도시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권 계약은 도시권의 이익이 있는 사업이 대상이며, 도시계약(contrats de ville)에 배정된 예산은 도시권 계약에 포함된다(Moreau, 124-129).

대도시공동체(CU)는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유형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행정 및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 31일 법률에 의하여 리옹(Lyon), 릴(Lille), 보르도(Bordeaux),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등 4개 도시권에 창설되었다. 그 후 해당 코뮌의 의결에 의하여 다른 도시권에도 설립되어 2008년 1월 현재 14개에 이르며, 이 중에서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도시권이 2개(리옹 118만명, 릴 110만명),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도시권이 5개(마르세이유, 보르도, 낭트), 50만명 미만인 도시권이 7개이다(Ministère de l'Intérieur/DGCL 내부자료).

<표 4>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현황(2004.1)

명 칭	코뮌 수	인구	세금제도
Lyon	55	1,186,754	단일사업세
Lille	85	1,108,318	단일사업세
Marseille	18	991,953	단일사업세
Bordeaux	27	671,875	단일사업세
Nantes	24	568,517	단일사업세
Strasbourg	27	456,551	단일사업세
Nancy	20	264,657	단일사업세
Brest	8	221,600	단일사업세
Dunkerque	18	212,241	단일사업세
Le Mans	9	194,138	4개 지방세
Le Creusot Montceau-les-Mines	6	94,501	단일사업세
Arras	24	93,638	단일사업세
Cherbourg	5	91,717	4개 지방세
Grand-Alençon	19	52,700	4개 지방세
합 계	355	6,209,160	

주 1): 단일사업세(taxe professionnelle unique)는 지역 전체에 사업세의 단일율이 적용됨

자료: Moreau(2004), 114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1999년 7월 개정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대도시공동체는 주민수 50만명 이상으로 도시개발 및 지역계획의 공동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대도시공동체는 공동체구역의 인구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코뮌의 수에 따라 50~90명 인원의 공동체의회(conseil de communauté)가 구성된다. 이 공동체의회의 구성 인원은 각 코뮌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표이지만, 공동체의회에 대표를 보내기에 지나치게 소규모인 코뮌은 적절한 선거구로 연합하여 공동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러한 대도시공동체에는 경제·사회·문화발전계획과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교통, 상하수도, 물관리, 쓰레기 처리, 소방 등을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대도시공동체(CU)는 독자적인 권한과 함께 자체 재원을 가진다. 재원은 첫째로 코뮌간 협력체의 일반적인 수입인 재산수입, 기부 및 증여금, 부담금, 국가보조금 등이고, 둘째로 코뮌의 직접 지방세를 징수하며, 셋째로 경상비교부금(DGF), 설비투자비교부금(DGE), 지방설비세, 교통불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대도시공동체 의회가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2002년 1월 1일부터 단일 사업세(TPU)를 갖게 된다(배준구, 2004a: 179-180).

대도시공동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리옹 대도시공동체는 55개의 코뮌(인구 5만 이상)로 구성되며, 코뮌(의회)에서 각 3명의 대표의원을 선출하여 리옹권(Grand Lyon) 의회를 구성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옹시의 시장이 총괄 책임을 담당한다(안영훈, 13-14).

3. 광역권 개발의 추진체제와 전략의 특징

1) 추진체제

첫째, 광역권의 개발에 관련 되는 기관과 참여 주체는 상당히 다원화 되어 있고 복잡하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차원과 지역 차원의 협력, 연계,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DIACT(구 DATAR)는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각종 활동을 조정, 촉진 및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 연구 및 혁신 등을 포함하는 독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간 협력사업은 조정위원회와 부처간 사업단 등의 역할을 통하여 연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테면 경쟁거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부처간사업단(GTI)과 협력하여 레지옹 지사와 협정을 체결하며, 다양한 주체들(레지옹의회, 데파르트망의회, 도시권연합체 등)이 사업에 참여하여 재원을 부담한다(DIACT 내부자료; 배준구, 2008a: 229-237).

둘째,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경우 여러 코뮌을 결합하는 각종 공동체(대도시공동체, 도시공동체, 농촌공동체) 등의 협력 기구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레지옹 차원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의회와 특별지방행정기관(레지옹지사)를 이용하며, 산악 및 연안 지대의 경우 이들 기관을 포함한 참여주체들 상호간에 지역간 협력(다년도 협정, 계획계약)이 일반화 되고 있다.

셋째, 초광역권에 두고 있는 부처간 및 지역간 협력사업단(MIAT)은 그 구역(경계)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유연한 협력구조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이러한 지역간 협력사업단(MIAT, MEDCIE)은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임명 레지옹 지사(préfet)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레지옹간 협력체로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다.

넷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원화되어 있어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인 지사가 중앙부처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광역권 계획(초광역권 포함)을 비롯한 각종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상, 조정을 하고 계약 등을 체결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 이후 중앙부처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 이양과 동시에 레지옹 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로서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광역권의 개발 전략

첫째, 광역권 개발의 계획 및 제도는 연구, 검토, 전망 또는 실험 등을 거쳐 보완, 개선을 통하여 점진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광역권 계획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계획계약제도는 1970년대에 도시공동체 등의 시행 경험을 통해 개발의 계획화를 승화시킨 것이다. 초광역적 차원 지역간사업단들(MIAT, MEDCIE)과 지역경제개발청(commissariats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도 지역적 실험을 거쳐 점진적 발전을 모색하였다.

둘째, 지역정책은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의 조정 및 촉진 기능은 유지하면서 분권적 방식을 수용(국가 임명 지사에게 권한 위임, 위원회의 자문 기능 강화 등)하고, 레지옹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였다. 광역권 개발 계획에서 조정, 촉진 및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광역권의 재원은 참여주체, 즉 중앙정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분담하며, 다년도 계획계약(5년 - 7년 단위)과 다년도 협정(3년 - 5년 단위)을 체결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레지옹 차원에서 광역권 개발을 위하여 1984년부터 도입한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 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은 지역개발 관련 계약의 체결 주체인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이 지원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기구인 각종 공동체(대도시공동체, 도시공동체, 농촌공동체 등)와 협력,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계약의 재원은 국가와 레지옹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레지옹의 잠재력이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실제 레지옹의 부담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계획계약 제도는 주로 국가와 레지옹간에 체결되는데 관련되는 데파르트망, 코뮌, 공공기관, 도농권연합체, 도시권연합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넷째,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략으로 1972년에 테크노폴(technopôle), 1994년에 지역기술계획(RTP)사업, 1997년에 지방생산체계(systèmes productifs locaux), 2004년에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산업클러스터에 해당)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광역권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경쟁거점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테크노폴은 2006년 현재 48개가 설치되어 7,500개 기업, 175,000명이 고용되고 있다. 지역기술계획사업은 1990년대에 로렌(Lorraine), 오베르뉴(Auvergne) 등의 지역에서 지역혁신전략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지방생산체계는 지역별로 특정분야의 특화된 기업을 집적하여 생산과 기술을 전문화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지역 전체에 총 100개를 정하였다. 특히 경쟁거점 전략은 총 71개 경쟁거점 중에서 2개 이상의 레지옹(4개 지역간 2개, 3개 지역간 8개, 2개 지역간 17개)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간 협력사업이 전체의 38%에 이른다(배준구, 2008a: 221-237).

다섯째, 대도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도시공동체(CU)는 독자적인 권한과 함께 자체 세원(지방세, 단일 사업세 등)을 보유하고 있어 대도시권 계획 및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에 코뮌들을 결합한 협력공간인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를 지역개발의 기본 단위로 도입하여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와 도시 네트워크로의 재구성과 함께 지역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섯째, 광역권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1970년대에 설치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역경제개발청은 기업(주로 세계적 기업)의 시장조사와 유치, 산악지역의 경제개발과 현대화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간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

V. 맺음말 및 시사점

프랑스는 세계화의 진전, 유럽연합의 역할 강화, 분권화 등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광역권 개발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제와 전략을 도입하였다. 광역권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검토와 실험을 통하여 점진적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분권화 시대의 새로운 계획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계획계약 제도를 비롯하여 다년도 협정, 지역경제개발청(commissariats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등은 지역적 시행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DATAR, 현 DIACT)가 실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6개 초광역경제권(super-régions)의 지역간 협력사업단(MIIAT, 2003년부터 MEDCIE로 대체)의 구성과 장기계획 구상 등은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광역권의 개발을 위한 추진체제와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에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에서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이라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체계를 발표하였고,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을 구현할 중앙과 지역차원의 추진조직이 마련될 예정이다. 프랑스 광역경제권의 설정 방식과 추진조직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프랑스의 초광역권은 계획권역의 개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전망, 실험을 하는 지역간 연구체제이고, 6개 초광역권에 두고 있는 부처간 및 지역간 협력사업단(MIIAT)은 경계를 고정하지 않으며,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의 구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지방정부, 대학, 기업 등)의 자율성 부여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창기에는 계획권역 차원에서 협의회와 같은 유연한 협력구조와 협약 방식을 활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광역적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새로운 추진체제를 마련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둘째, 광역권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계획계약과 다년도 협정(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프랑스의 계획계약 제도는 분권화 시대의 광역권 개발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프랑스의 계획계약을 모방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공무원, 관련 기관)의 이해와 공감대 결여로 아직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논의를 거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도입한 대표적인 사업인 프랑스의 경쟁거점 전략(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은 지역간 및 국경을 초월한 협력사업의 비중이 높다. 즉 지역간 및 국경 초월한 광역권 협력사업이 경쟁거점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산악 및 연안 지대의 경우 지역간 협력(다년도 협정, 계획계약)이 일반화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광역권 개발 전략과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지역개발의 새로운 기본 단위로 도농권연합체(pays)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를 도입하여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와 도시 네트워크로의 재구성과 함께 지역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합체들은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작은 협력공간이며, 기존 광역도시기본계획(SD)을 대체한 지역결속계획(SCOT)의 지역 단위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한국의 광역권 개발계획과 추진체제 구성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프랑스는 광역권 개발 전략으로 한편으론 중앙정부의 조정 및 촉진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분권적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근에 확대 개편된 DIACT(구 DATAR)는 지역정책 및 광역권 개발에서 각종 활동을 조정하고, 일상적인 의미의 지역발전 추진기구가 아니라 홍보, 촉진 및 재정 지원, 연구 및 혁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레지옹에게 지역계획 등에 대한 권한 확대, 국가 임명 레지옹 지사에게 권한 및 재원의 위임과 조정 기능 강화, 수평적인 계약 및 협정 방식 활용, 각종 위원회의 자문 및 평가 기능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권 개발 및 정책과 관련한 부처업무의 분산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약하고, 지역간 협력과 연계의 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배준구. 2004a. 『프랑스의 지방분권』. 부산: 도서출판 금정.
- 배준구. 2004b.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국토계획』 39권 1호. 283-305.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 배준구. 2004c. “프랑스의 지역발전 추진기구”. 『지방정부연구』 7권 4호. 93-114.
한국지방정부학회.
- 배준구. 2003. “프랑스 수도권 정책의 수단과 효과”. 『지방정부연구』 6권 4호. 123-143.
한국지방정부학회.
- 배준구. 2006. 『프랑스의 지역계획과 계획계약』. 부산: 도서출판 금정.
- 배준구. 2007. “프랑스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아비뇽 축제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14집
37-63. 한국프랑스문화학회.
- 배준구. 2008a. “프랑스의 지역혁신정책”. 『프랑스문화연구』 15집. 217-241. 한국프랑스문화학회.
- 배준구. 2008b. “프랑스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 『사회과학연구』 24집 3호.
273-292.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안영훈. 2008. “영국과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추진체제 비교 연구”. 2008년도 하계공동
동학술대회(한국행정학회 등) 발표논문 프로시딩. 1-19.
- 정옥주. 2004.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교민)간 협력, 『국토계획』 39권 6호.
215-230.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 차미숙 외.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
연구원
- DATAR. 2003. Rapport d'activité 2003.
- DATAR . 2002a. *Les contrats de plan Etat-Région*.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DATAR . 2002b. *Pays du Nord*.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DATAR. 2000. *Aménager la France de 2020*.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Dantonel-Cor, N. 2005. *Dro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Bréal.
- Damette F. et Scheibling J. 1992. *Le Bassin Parisien : système productif et
organisation urbaine*. DATAR.
- Daviet, S. 2002. *Les industriels et l'aménagement du territoire. La politique
d'aménagement de territoire*. Press Universitaires de Rennes.
- DIACT. 2006. *Rapport d'activité 2006*.
- Girardon, J. 2006. *Politiqu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ellipses.
- Jacquet N. et Darmon D. 2005. *Les pôles de compétitivité: le model françai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Leroy M et Portal E. 2006 . *Contrat, Finances, Territoires*, Paris: L'Harmattan.

- Leurquin, B. 2002. La politique des pays: points clés et difficultés d'application. La politique d'aménagement de territoire. Press Universitaires de Rennes.
- Madiot, Y., et Mestre, R. L. 2001. *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Armand Colin.
- Mangin C. 2002. *Les coopérations interrégionale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Merlin, P. 2007.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n France*. Paris: PUF.
- Ministère de l'Intérieur/DGCL. 2008.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08*.
- Monod, J et Castelebjac P. 2006. *L'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PUF.
- Moreau, J. 2004. *Administration régionale, départementale et municipale*. Paris: DALLOZ.
- Noin D. 2003. *Le nouvel espace français*. Paris: Armand Colin.
- Philipponneau, M. 1991. Stratégies de développement du Bassin Parisien. Une nouvelle phase pour l'aménagement du territoire. Les Cahiers. 33. C.N.F.P.T.
- <http://www.competitivite.gouv.fr>
- <http://www.diact.gouv.fr>
- http://www.diact.gouv.fr/fr_1/diact_partenaires_49/relais_tutelles_327/agences_regionales_developpement_747.html
- <http://www.paca.pref.gouv.fr/frameset.php>
- http://www.paca.pref.gouv.fr/sgar/publications/docs/ras/2005/ra2005_part1.pdf